



주간통일정세 2008-43(2008.10.20~10.26)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08-43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중병설 급속 확산… ‘입 단속’ 특별감찰(10/26, 조선일보)

-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는 최근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소문이 내부에 급격히 확산돼 체제가 불안해지자 이를 단속하기 위한 대대적인 감찰에 나선 것으로 알려짐. 최근 국경을 넘은 인민군 군관(장교) 출신의 한 탈북자는 “김정일 건강이상설은 이미 7월경부터 군대 내에서 퍼지기 시작했다”고 언급, 공화국 창건 60돌(9월 9일)을 기념해 인민군에서 차출된 수만 명의 군인이 군사 퍼레이드를 준비하다가 9월 9일을 두 달 앞둔 시점에 전격 취소되면서 건강이상설이 나돌기 시작했다고 함.

● 김정일, 하사품으로 견제 과시(10/17; 10/13, 조선중앙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건강이상설 속에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각종 ‘하사품’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자신의 ‘견제’를 확인시키고 있음.
- 김 위원장의 ‘하사’에 대한 북한 매체들의 보도는 특히 김 위원장이 여성포중대를 시찰했다는 10월 1일자 보도 이후 빈번, 조선중앙방송은 13일 보도에서 김 위원장이 80세를 맞은 주민 2명에게 생일상을 보냈다고 전했고, 17일 보도에선 김 위원장이 북측 강원도 고산군에 있는 고산과수농장에 영농물자들을 보내고 인민대학습당에 도서와 CD를 보냈다고 보도
- 21일엔 김 위원장이 100항차 무사고 운항을 달성한 화물선 ‘주작봉 5호’ 선원들에게 ‘감사’를 전달했다고, 24일엔 고 김일성 주석 동상과 당창건 사적관, 혁명전적지와 사적지의 관리에 기여한 주민들에게 ‘감사’를 보냈다고 소개, 그러나 조선중앙방송과 조선중앙TV는 하사품을 보낸 시기를 “최근”, “얼마 전” 등으로만 밝히거나 아예 언급하지 않고 있음.

● 김정일, 평양시내 병원서 요양 중(10/22, 자유아시아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의 한 병원에서 요양 중이며 김 위원장이 그동안 행사해왔던 결정권은 노동당과 군부에 위임된 상태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미 동부시간) 보도
- RFA는 중국 내 북한소식통의 말을 인용, “두 달 가까이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김 위원장은 거처를 평양의 한 병원으로 옮겼으며 북한 노동당 조직 지도부와 군부가 북한의 정책 결정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라고 전언, 이 소식통은 김 위원장의 후계구도에서 거론됐던 매제 장성택 당 중앙위원회 행정부장에 대해 “언론에 알려진 것만큼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오히려 당과 군부로부터 견제를 받고 있다”며 “(사실상 네 번째 부인인 것으로 알려진) 김옥 국방위원회 과장에 관한 얘기를 더 많이 들었다”고 언급 - RFA는 이어 “(이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지난 1년 가까이 치매로 고생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며 “김 위원장의 잠적이 두 달 이상 지속되면서 북한 내각과 국가보위부, 보안성 등 권력기관에서도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언

나. 정치 관련

- **北, ‘배달’ 민족 어원론을 김정일 선전에 활용(10/25, 우리민족끼리)**
 - 북한은 한민족을 일컫는 ‘배달민족’의 ‘배달’이라는 말이 “인류문화의 발상지의 하나인 대동강 일대에서 고조선을 세운 종족의 이름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하고 이를 은연중 김일성·김정일 부자에 대한 충성 강조로 연결시킴.
- **北, 대북 전단살포 거둬 비난(10/25, 노동신문; 통일신보)**
 - 노동신문은 25일 남한의 남북자 단체나 탈북자 단체들에 의한 대북 전단 살포는 남한 정부의 “전면적인 배후조종”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전단 살포 문제를 거둬 제기
 - 신문은 ‘6·15통일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망동’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통일부가 이들 단체에 전단살포의 자제를 요청한 것에 대해선 “요청하는 놀음을 벌였다”고 불신감을 표시하고, 촛불시위에 대한 진압을 가리켜 “체제상 특성을 운운하며 극우보수 단체들의 반공화국 뼈라 살포행위를 통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궤변”이라고 주장
 - 통일신보도 25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공화국을 반대하는 뼈라 살포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남한 단체들이 날린 전단이 “강원도와 황해남북도를 비롯한 군사분계선 일대”와 개성공업지구, 금강산관광지구 및 그 주변 구역과 개성시 중심까지 도달하고 있다고 밝힘.
- **남북, 27일 군사실무자 접촉 합의(10/27, 연합)**
 - 남북은 27일 오전 10시 남북관리구역 서해지구 내에서 중령급 군사실무책임자 접촉을 하기로 합의, 국방부는 25일 “남과 북은 북측의 제의로 남북 군사실무책임자 접촉을 27일 오전 10시 갖기로 했다”며 “이번 접촉에서는 군 통신 정상화 문제를 비롯한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현안이 협의될 예정”이라고 밝힘.
 - 우리 측에서는 서해지구 군사실무책임자인 김정배 육군중령 등 4명이, 북측은 상좌(중령과 대령사이 계급)급 장교 3~4명이 참석, 북측은



전날 오전 남측에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27일 오전 접촉을 하자고 제의했으며, 우리 측이 북측 제의에 동의해 접촉이 성사

- 군 일각에서는 북측이 군 통신망 현대화 문제를 의제로 내세웠지만 일부 시민단체의 대북 중단(빠라) 살포 행위에 대해 비난을 하기 위해 군사실무자 접촉을 제의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

● 한미안보협의회 “대결선포” 비난(10/24,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한국과 미국이 10월 17일 미국에서 제40차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열고 북한의 급변사태 대비와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을 논의한 데 대해 “우리(북한)에 대한 용납 못할 도발이며 전면 대결선포”라고 24일 비난
- 조평통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한미의 이런 행보는 “무모한 북침 핵 전쟁 책동이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는 엄중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입증해 준다”며 “무분별한 침략야망이 실천에 옮겨지는 경우 조선반도는 물론 주변지역까지 참혹한 핵재난을 당하게 되리라는 것은 너무도 명백하다”고 강조
- 성명은 또 이상희 국방장관을 “극악한 대결분자”, “전쟁광신자” 등으로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을 모독하고 침해하는 도발자들을 추호도 용서치 않을 것이며 필요한 조치들을 강력히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으로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는 언급하지 않음.

● 北에선 지금 김정일 ‘담화’ 학습중(10/23, 평양방송; 10/21, 조선중앙방송)

- 북한에서 ‘건강이상설’로 장기간 공개활동을 앓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9월 5일 노동신문과 민주조선에 보냈다는 ‘담화’에 대한 주민들의 학습이 대대적으로 전개
-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북한 정권 수립 60주년(9.9)을 앞둔 9월 5일 노동신문과 민주조선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패의 위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 국가이다’라는 장문의 담화를 썼다며 한 달 뒤인 10월 10일 뒤늦게 담화 전문을 소개
- 담화는 북한 정권 60년사를 개관하고 ‘선군정치’ 유지 방침을 밝히면서 국방력 강화와 경제건설을 강조하고 개혁·개방에 대한 거부입장과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을 강조하는 등 구성과 내용면에서 신년 공동사설(신년사)과 유사하며 ‘담화’ 발표 이후 북한 매체들은 보름이 10월 24일까지도 계속 반복 보도하면서 각 계층의 반응을 내보내고 있음.



- **北, 한국전 납북자 문제도 “대결소동” 주장(10/24,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 노동신문은 24일 한국전쟁중 민간인 납북이 북한의 군사적 필요에 조직적으로 저질러졌다는 한 연구자의 주장에 대해서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전면 차단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신문은 ‘대결 미치광이들의 불순한 날조품’ 제목의 논평에서 최근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KWARI) 주최 학술모임에서 허만호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6·25전쟁중 납북사건은 북한의 전쟁 정책의 일환이었다”며 조직적 민간인 납북론을 제기한 것에 대해 “북에 의한 그 무슨 민간인 납치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또 있어본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파국상태에 놓인 북남관계를 극한점으로 몰아가는 동시에 남조선 사회에 동족에 대한 적대감을 불어넣고 불신을 야기시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전면 차단하자는 데 있다”고 비약

- **北, 김정일이 혁명의 진두에 있다고 사상 교양(10/23,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얼굴없는 통치’가 70일째 지속되는 가운데 조선중앙통신은 23일 “조선(북한) 인민이 지닌 필승의 신심과 낙관의 원천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고 있는 데 있다”고 강조
 - 통신은 ‘조선인민이 지닌 필승의 신심과 낙관의 원천’이라는 제목의 보도물에서 또 “앞으로도 조선 인민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 선군혁명의 진두에 서” 있는 한 “사회주의 강성대국은 반드시 건설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체혁명 위업의 완성을 위해 역세게 싸워나갈 것”이라고 주장

- **北, 잇따라 金통일 국감발언 비난(10/22, 노동신문: 10/23, 민주조선)**
 - 북한은 22일 노동신문에 이어 23일 민주조선을 통해 김하중 통일부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10·4선언 이행요구로 남북관계가 어려워졌다”고 발언한 것을 “흑백을 전도한 궤변”이라거나 “남북관계 파탄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려는 것이라고 비난
 - 민주조선은 ‘대결 광신자의 황당무계한 넋두리’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핵문제가 해결 안되면 개성공업지구 확대는 없다”는 김 장관의 발언과 10·4선언 1주년 행사 불참 및 국군의 날 행사 참석 등 김 장관의 행적도 다시 거론해 “동족대결 의식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잘 말해준다”고 비난

- **北, 혁명1,2세의 전통 계승 강조(10/2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이 21일 ‘백두의 혁명전통은 새세기 진군의 보검이다’라는 제목의 논설에 “우리 혁명정세는 의연히 복잡하고 침예하다”며



“혁명의 1세대들이 개척하고 2세대들이 굳건히 고수해온 주체혁명 위업의 성패는 3,4세의 준비 정도와 역할에 달려있다”고 ‘혁명전통의 계승’을 역설

- 신문은 특히 “혁명의 1세대들을 몰라보고 그들의 공적을 무시하려는 사람들”, “환경의 변화와 시대의 추세를 운운하며 혁명 선배들이 목숨바쳐 개척한 투쟁의 길에서 탈선하려는 사람들”, “목전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선배들의 업적에 먹칠을 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을 혁명가 자격이 없는 배신자와 별절자들이라고 배척함으로써 현재 북한의 주축을 이루는 3,4세대의 의식상태에 대한 우려를 우회적으로 드러냄.

* 앞서 2006년 노동신문은 1,2세는 혁명을 개척해온 세대로 고 김일성 주석이 대표세대라면, 3,4세는 “광복 후와 6.25전쟁 시기 그리고 전후에 태어났거나 책보를 끼고 다니던 세대”라며 김정일 위원장이 이들 세대를 대표한다고 주장

- 노동신문은 “혁명의 계승은 사상의 계승, 원칙의 계승”이라며 “변화된 환경에 맞게 구체적인 전술과 정책들은 변할 수 있어도 혁명의 근본바탕에 놓여있는 사상과 원칙들은 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 앞으로도 기존 사상과 노선에서의 이탈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음.

● 北, 작계5029 등은 흡수통일론 반발(10/2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대결관념에 빠져있는 자들에게는 출로가 없다’ 제목의 논평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제기된 이후 남한에서 거론된 ‘작전계획-5029’와 ‘급변사태 대비 계획’ 등을 “반민족적인 흡수통일 야망”이라고 비난

다. 경제 관련

● 北, 프로그램 경연·전시회 개막(10/24,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과학자와 기술자, 학생들이 참가한 제19차 전국 프로그램경연 및 전시회를 23일 평양 3대혁명전시관에서 개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 행사장에는 컴퓨터 조작체계용 응용프로그램 수백건과 내각의 성, 중앙기관들이 생산, 기술, 경영관리에 정보기술(IT)을 적용했던 자료들이 전시되었으며 음성·문자 인식 프로그램과 기계번역 프로그램 경연, 정보기술분야 발전 동향에 대한 강연 등이 행사 기간 진행된다고 통신은 소개
- 개막식에는 최태복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와 로두철 부총리, 변영립 국가과학원장 등이 참석

● 원자재 부족 과학기술로 극복 강조(10/2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3일 경제건설에서 당의 과학기술 중시 노선을 철저히 구현해 나가자’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하여 북한이 원자재 부족 등



많은 애로와 난관이 가로놓인 실정에서 ‘경제 강국’을 건설하려면 과학기술의 발전과 도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

● 노동당, 추곡 균량미 우선확보 지시(제238호, 오늘의 북한소식; 10/23, 연합)

- 북한에서 추수가 한창인 가운데 북한 노동당은 올해 농촌에서 농민들에게 곡식을 ‘결산분배’할 때 농장마다 1년치가운데 3-5개월분만 분배하고 나머지는 균량미로 거두라는 지시를 전역의 시·군에 내렸다고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이 23일 보도, ‘오늘의 북한소식’ 제 238호에서 노동당이 10월 9일 농업성으로부터 올해 작황을, 인민무력부 후방총국으로부터 비축미 실태를 각각 보고받은 뒤 이러한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

● 유니세프 평양소장, 北 90년대 최악상황 재연 중(10/23, 연합)

- 고평란 발라고팔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 북한사무소 대표는 23일 “북한에서 1990년대 말에 있었던 최악의 식량난 상황이 다시 전개되고 있다”고 주장, 그는 “올해의 식량난은 지난해 있었던 흉수가 식량 공급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면서 최근 북한에 대한 한국과 중국 등의 식량 원조가 많이 줄어든 점도 이유로 들.

● WFP, 北동북부에 인도주의적 비상사태(10/22, WFP Operational Priorities 보고서; 10/23, 자유아시아방송)

-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 부족으로 최근 북한의 식량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으며, 긴급 지원이 없으면 북한 동북부의 함경북도와 양강도 전역 및 함경남도 일부 지역에서 ‘인도주의적 비상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세계식량계획(WFP)이 발표
- WFP는 22일 발표한 월간 ‘사업 우선순위(Operational Priorities)’ 보고서에서 대북 지원을 위해 보유한 자체 식량이 곧 동날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긴급 지원을 호소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3일 보도
- WFP는 보고서에서 “(약속된) 식량원조 선적분의 전달이 늦어지고, 다른 원조국들의 제한된 기부로 앞으로 6개월간 북한에 지원할 식량이 심각하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 부족분을 14만 7천으로 추산, 보고서는 북한 “서부 지역의 2백70만 주민들에 대한 WFP 지원 식량은 10월 초부터 떨어지기 시작했고, 특히 식량 상황이 취약한 동부 지역의 1백40만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식량은 11월중 모든 종류가 완전히 동날 것”이라고 설명
- WFP는 함경북도와 양강도 전역 및 함경남도 일부 지역의 식량난 등급을 ‘극심한 식량·생계 위기’로 분류했는데 이는 ‘만성적인 식량난’과 ‘인도주의적 비상사태’ 사이의 단계



- 한편 미국 정부가 북한에 지원키로 한 식량 50만t중 10만t의 분배를 책임진 미국의 5개 민간단체(NGO)들은 미국 정부의 예산으로 독자 구매한 옥수수 2만t과 콩 5천60t을 싣고 10월 17일 미국 버지니아 주 노포크항을 떠난 미 국적선 ‘메리 앤 허드슨’ 호가 예정대로 11월 18일께 북한 남포항에 도착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 이번 선적분은 머시 코어, 월드 비전, 사마리탄스 퍼스, 글로벌 리소스 서비스,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 등 5개 단체가 평안북도와 자강도의 25개군에 분배할 식량
- 이들 단체는 지난 8월말 평양과 평북 신의주, 자강도 희천에 상주사무소를 연 뒤 지난주 컴퓨터 12대와 다목적 차량 등을 북한에 반입하는 등 식량분배와 감시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침. 한 NGO 관계자는 “현재 인공위성과 연결해 사용자들간 음성과 화상 정보를 양방향으로 송수신할 수 있는 VSAT 위성통신망을 설치하기 위해 기술자들이 북한에 파견돼 있다”고 설명

● 8월 3일 인민소비품전시회(10/22, 조선중앙방송)

- 전국 8월3일 인민소비품전시회가 21일 평양에서 개막됐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이번 전시회에는 전국 각지 공장, 기업소, 리(里)·읍·구의 간이생산작업반, 시·군 직매점의 이용생산반과 가내편의봉사원들이 생산한 1만여종의 소비품이 전시

● 北, 먹거리만 많으면 두려울 것 없다(10/2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우리 행복의 열매를 우리의 힘으로’라는 제목의 장문의 정론을 통해 세계적인 식량위기 상황을 전하면서 “오늘의 이 엄중한 식량위기 앞에서 믿을 것은 오직 하나 우리의 힘, 우리의 땀, 우리의 피타는 헌신과 노력뿐”이라며 식량문제의 자체 해결을 강조
- 노동신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농사는 천하지대본”이라며 “오늘 우리나라에서 농업문제는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에서 결정적으로 풀어야 할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 있다”고 말한 사실을 상기한 후 “쌀은 곧 사회주의이고 강성대국”이라고 역설
- 신문은 특히 “우리에게 생명선처럼 귀중한 것은 바로 쌀, 식량”이라거나 “혁명의 수뇌부의 두리에 천만 군민이 철통같이 뭉친 강위력한 일심단결이 있으며 우월한 사회주의 제도가 있는 우리에게 이제 먹을 것만 많으면 무서울 것, 두려울 것이 무엇인가”라며 식량문제의 절박감을 드러냄. 또 비료와 농약, 기름 등 모든 것이 부족한 실정임을 실토했고 “농업생산에서도 기본은 물질적 조건이 아니라 정신력”이라고 ‘정신력’을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함으로써 농업증산을 위한 물질적 수단들을 북한 당국이 공급해줄 능력이 없음을 간접 시인



● **北, 여성용 귀금속 장식품 해외 판매(10/22, 조선신보)**

- 북한 최고의 미술창작 단체인 만수대창작사의 금속공예창작단이 여성용 귀금속 장식품들을 만들어 산하의 대외판매 담당 만수대원드합작회사를 통해 해외 판매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조선신보 인터넷판이 22일 보도
- 신문에 따르면 1991년 여성 장식품을 만드는 전문집단으로 출범한 이 창작단에서는 목걸이와 반지, 귀걸이, 팔찌 등 여성용 장식품을 주로 제작하고 있으며 세쌍둥이에게 선물로 주는 은장도와 금반지는 물론 장식용 공예품과 축전 컵 등 귀금속 공예품들도 만들고 있음.
- 창작단에는 평양미술대학 출신들로 “시야가 넓고 박식”한 도안미술가들과 세공기술이 뛰어난 제작자들이 망라돼 있어 매년 20만~30만 점의 귀금속 장식품을 생산, 북한 전역의 상점들에서 판매,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이에 관심을 갖고 이곳 디자이너와 기술자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이탈리아의 보석 및 귀금속 제작자들로부터 기술을 전수받도록 조치해줬으며, 외국 견습도 여러 차례 보내줬다고 신문은 보도

● **北 배급층 하루세끼는 10명중 2.5명만 가능(10/22, 연합)**

- 장 피에르 드 마저리 세계식량계획(WFP) 평양사무소장은 북한에서 경작 외에 수렵이나 채집을 통해 식량을 얻는 인구가 공공배급 대상자의 경우 2003~2005년 평균 50% 선이었다가 2008년 70%를 넘어섰고, 협동농장원의 경우 60% 초반에서 70% 중반으로 크게 증가, 또 친지로부터 식량을 지원받는 도시민의 비율도 2003~2005년 60% 초반에서 올해 80%를 넘어섰으며 하루 세끼를 먹는 비율은 협동농장원 10명중 6명 꼴인 데 비해 공공배급 의존층은 2.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세계보건기구(WHO) 평양사무소의 보건의로 전문가인 아빈드 마서(Arvind Mathur) 박사는 ‘임산부 및 영유아 사망률 감소 전략’이라는 제목의 발표문 영양부족으로 인해 “북한의 산모들은 빈혈, 영양부족, 야맹증, 저체중 출산 등의 현상을, 아동들은 만성 또는 급성 영양장애, 저체중 등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
- 북한의 산모 사망률은 10만명당 97명, 영아(생후 1년 미만) 사망률은 1천명당 20.23명, 5세 미만 유아 사망률은 1천명당 40.87명임.

● **北내각, 김정일 경제논문 실행 논의(10/20, 조선중앙통신)**

- 북한 내각은 최근 확대회의를 열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논문 ‘경제사업에서 사회주의 원칙을 고수하며 사회주의 경제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 데 대하여’의 실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 중앙통신은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중앙집권적 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내각의 책임과 역할을 높이는 문제, 경제작전과 지휘를 정책적 대를 세워 박력있게 조직.진행해 나갈 데 대한 문제 등이 토의됐다”고 보도



● **北경공업공장 지도 강화(10/15, 조선중앙방송)**

- 북한 경공업성이 올해 신년공동사설에서 강조한 “전투목표”인 ‘인민생활제일주의’에 따라 각 지역 경공업공장에 대한 경제지도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5일 보도

라. 사회·문화 관련

● **北, ‘보신탕’ 신선로도 국가규정 추진(10/14, 조선중앙통신)**

- 북한 당국이 각 산업분야에서 규격화와 표준화를 추진하면서 특히 ‘국제 규격화’를 강조하고 있어 대내적으로 제품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앞으로 있을 대외 개방에도 대비하는 것으로 보임. 북한의 규격화 사업을 총괄하는 국가품질감독국의 리호섭 국가규격제정연구소장은 ‘세계표준의 날’인 10월 14일 조선중앙통신과 인터뷰에서 “규격화 대상 영역을 계속 넓혀 나가며 국제 규격화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규격 제정사업에 적극 참가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
- 북한은 올해 신년공동사설에서도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계획규율, 노동행정규율을 강화하고 규격화 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발언 시점이 분명치는 않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제품의 규격을 바로 정해놓고 국규대로 생산하는 질서를 세우도록 해야 하겠다”고 지시했다고 노동신문이 지난 2월 전언
- 국규(KSP)는 한국산업규격(KS)에 해당하는 북한의 산업분야 ‘국가규정’임.

● **北 내각, 식목 등 국토관리 규정 정비(10/19, 민주조선)**

- 북한 내각이 “국토관리사업을 끊임없이 개선, 강화해 자연과 생활환경을 적극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개발 이용해 나갈 수 있게” ‘국토관리총동원 사업 규정에 대한 결정’을 채택했다고 민주조선 10월 19일자가 보도
- 신문은 이 규정이 제정됨으로써 “해마다 봄과 가을 나무심기철에 전국, 전민이 총동원돼 국토관리를 집중적으로 더욱 활발히 조직, 진행할 수 있는 튼튼한 법적 담보가 마련됐다”고 말하고, 이 규정에 따라 국토환경보호성을 비롯한 관련 기관이 규정의 집행대책을 세우게 된다고 덧붙였다. 규정엔 국토관리계획의 작성과 집행, 평가, 감독 및 통제 강화 항목들이 포함되었음.

● **北, 지적재산권 교육용 영화 제작**

- 조선중앙통신은 조선기록과학영화촬영소가 ‘지적소유권’이라는 제목의 과학영화를 제작했다고 전하고 이 영화는 “조선(북한)에서 채택된 지적소유권에 대한 법들과 지적소유권 보호활동을 소개하면서 지적소유권 체계가 과학과 경제발전에서 노는(작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설하고 있다”고 소개



- * 북한에선 ‘상표법’(1998.1 제정), ‘발명법’(1998.6), ‘저작권법’(2001.3),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법’(2003.6), ‘원산지명법’(2003.8) 등의 지적 재산권관련 법들이 시행중임.
- * 북한 당국은 지적소유권 업무를 과학기술지도기관과 품질감독 기관, 저작권사무국, 출판·문화지도기관, 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 등에 분담시키고 있으며, 최근 중장기 전략을 세워 지적소유권에 대한 법적인 보호와 장려를 강화

● **北, 인구 300만명 평양도 인구감축 추진(10/22, 연합뉴스)**

- 북한의 수도인 평양시가 최근 거주민 감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좋은벗들은 “10월 들어 평양시는 ‘지방에 내려가서 생활할 데 대한’ 지시를 내리고 인구 감축을 적극 유도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하다”며 “지방에 내려가는 세대에는 각종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는 선전에도 시민들은 좀처럼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보도
- 소식지는 “평양도 식량과 전기, 수도물, 가스, 석탄, 교통 등 모든 면에서 공급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지방보다는 낫고, 죽물을 먹더라도 지방에서 풀죽 먹으면 평양에서는 옥수수죽이라도 먹는 게 현실이라는 것이 시민들의 공통된 견해”라고 소개

2. 대외정세

가. 6자 회담관련

● **러 6자회담 대표, 지금이 북핵 진전의 중요한 단계(10/23, 연합뉴스)**

- 북핵 6자회담 러시아 측 수석 대표인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외무차관은 23일 “지금 이 한반도 비핵화 실현의 중요한 단계인 만큼 당사국 간 협조가 절실하다”라고 주장, 보로다브킨 차관은 모스크바 외무부 영빈관에서 한국 측 수석 대표인 김 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북한의 테러지원 해제 이후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핵 불능화 프로세스와 6자회담 개최 시기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

● **당국자, 대북 에너지 지원국 모색중(10/20, 연합뉴스)**

- 정부 고위당국자는 20일 핵시설 불능화의 대가로 북한에 제공되는 대북 에너지 지원에서 일본몫(중유 환산 20만t)을 대신 부담할 나라를 모색하고 있다면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언급
- 당국자는 “일본인 납치문제로 대북 에너지 지원 참여를 거부하는 일본의 입장에 따라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유력한 대상이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언급, 앞서 북핵 6자회담의 미국측 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19일 아사히(朝日)신문



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곧 일본 대신 대북 에너지 지원에 참여할 새 후원국을 얻게 될 것 같다”고 밝힌바 있음.

- 힐 차관보는 일본을 대신할 국가가 어떤 국가인지는 말할 수 없지만 현재 6자회담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이외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답변했으며, 외교가에서는 호주나 유럽연합(EU) 등을 유력한 대상으로 추정

나. 북·미 관계

● 美, WMD물자거래 남·북기업 등 제재(10/24, 미 연방관보 웹사이트)

- 미국 정부가 북한과 이란, 시리아에 대량살상무기(WMD) 제조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한 남·북한 기업을 비롯해 9개국 13개 업체에 대해 지난 8월 중순 제재를 가했던 것으로 나타남.
- 24일 미 연방관보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에 따르면 미 정부는 WMD관련 물자가 북한, 이란, 시리아로부터 반출 또는 이들 국가로 반입됐을 것이라는 믿을 만한 정보를 토대로 제재를 가했음. 제재대상 기업은 북한의 조선광업산업개발회사(KOMID)와 조선대성무역회사, 한국의 ‘Yolin/Yullin Tech, Inc.’, 러시아 국영 무기수출업체인 ‘로스보론엑스포트(Rosoboronexport)’ 등 13개 업체임.
- 이번 조치는 2010년 9월까지 유효하며, 이들 회사는 미국의 모든 정부 부처에서 실시되는 재화, 용역, 기술관련 조달계약에 참여하지 못하게 됨.

다. 북·중 관계

● 北·中 임업협력 양해비망록 체결(10/23, 연합)

- 북한과 중국이 임업협정에 관한 양해비망록을 체결, 23일 중국 국무원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북한 국토환경보호성 최상호 대외경제협력국 국장은 10월 12일 중국 국가임업국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해 다음날인 13일 북중 임업협력에 관한 양해비망록을 체결
- 양국은 양해비망록에서 앞으로 삼림정책, 법규, 기구 제정, 삼림경영, 자원관리 및 산지종합개발, 방화, 조림기술, 병충해방제, 야생동식물 및 습지보호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을 개시하기로 합의

라. 북·러 관계

● 北, 잇따라 러시아제 신형 여객기 구입(10/22,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의 고려항공이 잇따라 러시아제 여객기를 새로 구입해 중국항공사인 에어차이나와 서비스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 보도
- 방송은 2007년 12월 TU-204 1대를 구입한 데 이어 2008년 1대를 추가 도입했고, 앞으로도 러시아의 일류신(IL)-96이나 수호이(Sukhoi) 슈퍼제트100 등 신형 비행기로 노후한 기존 여객기를 교체할 계획이라고 보도



- 방송은 ‘중국의 여행업계’를 인용해 북한이 여객기를 교체하는 것은 북한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며, 과거에는 베이징에서 평양까지 1주일에 3번정도 운항했던 고려항공이 최근엔 하루 3번 이상 베이징과 평양을 오가는 경우도 있다고 보도
- 북한은 평양 공항의 활주로에서 공항 청사까지 승객을 이동시키는 공항버스도 러시아제 버스로 교체중인 것으로 알려짐.

마. 북·일 관계

● 北, 日 6자회담 참가자격 박탈 주장(10/25,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10/22,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10/21, 민주조선)

-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25일 북핵 6자회담은 핵문제 해결을 위한 장이지 북한과 일본간 현안인 일본인 납북문제를 논의하는 장소가 아니라며 “일본의 회담 참가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
- 방송은 일본이 “6자회담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납치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6자회담에서 이뤄진 합의의 이행을 거부하면서 대북 “제재소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북한은) 일본에게서 이제라도 회담 참가자격을 완전히 박탈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고 주장

● 北, 日 언론 중대발표설 보도는 허위날조(10/23,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용서치 못할 무엄한 행위라는 제목의 보도물에서 “우리는 그러한 발표를 생각해 본 적도 없으며 그와 관련한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며 일본의 요미우리신문과 산케이신문이 북한의 중대발표설과 해외주재 외교관들에 대한 대기령설을 보도한 것은 “완전한 허위 날조”라고 23일 주장
- 통신은 특히 두 신문이 “우리 최고수뇌부(김정일)의 ‘건강이상설’을 운운하면서 공화국(북한)의 존엄에 대해 악랄하게 횡설수설한 것”은 “너절한 모략행위”이고, “우리 체제의 공고성에 대해 배아파하면서 그에 먹칠을 해보려는 불순세력의 기도가 깔려있다”고 강하게 반발

● 北, 유엔서 日에 ‘위안부문제’ 해결 촉구(10/22, 조선중앙통신)

- 북한 대표는 10월 14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제63차 회의에서 일본에 대해 “위안부 문제를 속히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바. 기타외교 관계

● 北, 허리케인 피해 쿠바에 물자 지원(10/23,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잇단 허리케인 피해를 본 쿠바에 물자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8~9월 2차례 태풍 피해로 쿠바에서는 인명 피해와 많은 물질적 손실이 있었다”며 북한은



“쿠바 인민이 하루빨리 피해 후과를 가시고 안착된 생활을 누리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지원물자를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보도

-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9월 12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에게 전문을 보내 허리케인 피해를 위로하기도 했음.

● **인도네시아 대사관 관계자들 친선노동(10/22, 조선중앙통신)**

- 밤방 다라닌드라 대사를 비롯한 북한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관 관계자들이 22일 평안남도 강서군 약수협동농장에서 농장원들과 탈곡을 함께하며 지원활동을 벌였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北·라오스, 黨교류·협력 합의(10/22, 조선중앙통신)**

- 북한 노동당과 라오스인민혁명당이 21일 평양에서 ‘2008~2010년 협조 및 대표단 교류에 관한 합의서’를 조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
- 북한 측 최태복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와 라오스 측 당 중앙위 정치국 위원이자 대외관계위원장인 통룬 씨쑤릿 부수상 겸 외무장관이 합의서에 서명하고 합의서 조인식에는 김태중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과 라오스인민혁명당 대표단 관계자, 짜린 와린타라썩 북한 주재 라오스 대사 등이 참석

● **박의춘, 나미비아 정부대표단 면담(10/20, 조선중앙통신)**

- 박의춘 외무상이 20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북한을 방문한 마르코 하우스쿠 외무장관을 단장으로 한 나미비아 정부대표단을 만나 담화를 나눴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北·쿠웨이트, 항공로 협정 체결(10/20, 조선중앙방송)**

- 북한과 쿠웨이트 정부가 10월 15일 쿠웨이트에서 항공로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이 20일 보도, 허중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와 파와즈 압둘 아지즈 알 파라흐 쿠웨이트 민용항공 총회사회 위원장이 양국 정부를 대표해 이 협정문에 서명했다고 중앙방송은 보도

3. 대남정세

● **부산서 北에 보낼 ‘통일쌀’ 수확(10/26, 연합뉴스)**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부산본부는 26일 오전 부산 사상구 삼락체육공원 내 논(9천900㎡)에서 통일쌀을 수확하는 행사를 연다고 25일 발표

● **통일부, 北, 식량 위기상황 아니다(10/24, 통일부)**

-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금년 북한의 작황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중에 있어 식량상황을 정확하게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추수가 시작됐고 금년도 기상조건이 상당히 좋다고 하고 매년 오는 호우가 없었다”며 북한이 식량 위기상황 아니다라고 언급

- 김 대변인은 “벼나 감자는 잘됐고 옥수수는 비료를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데 비료가 부족해 작황이 안 좋았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다”며 “어떤 사람들은 북한의 당국자 얘기라고 하면서 올해 생산량이 480만t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고 얘기 하는 사람도 있다”고 전언

● 남북 언론, 기사·사진·동영상 교류 합의(10/23, 연합)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는 10월 18~22일 평양을 방문해 북측 언론분과위원회와 제4차 남북언론인 대표자회의를 열고 인터넷과 전자우편을 통해 기사를 교류하기로 합의했다고 23일 발표
- 양측은 남측 ‘통일언론’과 북측 ‘우리민족끼리’의 인터넷 매체를 통해 기사를 교환하기로 했으며, 전자우편을 통해 민족의 화합과 평화, 통일을 이룩하는 데 이바지하는 방향에서 보도기사, 논평, 사진기사, 영상기사 등 다양한 형식의 기사를 교환하며 필요한 경우 언론단체 등에서 보도하도록 합의

● 金통일, 북핵 진전시 10·4선언 사업 우선고려(10/23, 연합)

-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23일 영변 핵시설 불능화의 마무리 등 북핵 문제에 진전이 있을 경우 제2차 남북정상회담 합의인 10·4선언에 포함된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힘.
- 김장관은 또 지난 12일 미국이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했음을 언급한 뒤 “불능화가 예정대로 완료돼 간다면 그 과정에서 남북간 사업을 적극 검토·추진할 것이며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 해결 등 개성공단 활성화 조치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
- 그는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에 언급, “정부는 북한에 대한 직접 지원의 경우 차관 방식에서 무상 지원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향후 대북 지원시 보다 강화된 수준의 모니터링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 남북 화물열차 163회 중 150회 빈차운행(10/23, 연합)

- 남북정상회담 합의로 시작된 남북 간의 경의선 화물열차의 ‘빈차’ 운행률이 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권영세(한나라당) 의원이 23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2월부터 경의선 문산~봉동 구간을 운행한 화물열차는 지난 8월까지 163회 운행했고, 이 중 화물을 수송한 횟수는 13차례에 불과, 권 의원은 이 같은 빈차 운행으로 모두 2억7천153만원의 예산이 낭비됐다고 밝힘.

* 남북 경의선 화물열차 운행은 10·4 합의에 따라 2007년 12월 11일부터 도라산역~판문역 구간 운행을 시작했으며,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1차례 운행, 이 열차는 1월까지 총 12량이 운행됐으나, 수송 수요가 많지 않아 공여지책으로 2월부터는 화물이 없을 경우 기관차와 차장차 등 2량만으로 운행

● **柳외교부 장관, 北 핵무기 6~8개 추정(10/22, 연합)**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2일 외교통일통상위원회의 외교부 국감에서 “일반적으로 북한이 추출한 플루토늄으로 6~8개의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추정이 있는데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인지 확인이 된 것은 없다”고 언급, 또 “북한의 핵재처리 정황으로 볼 때 현재 일반적으로 추정하는 것이지 정확히 (핵무기 보유여부) 검증했거나 확인한 것은 없다”고 답변
- 유 장관은 ‘외교장관이 북한의 핵무기 숫자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송민순(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돼 있어 말했다”고 해명
- 또 그는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 아니냐’는 질문에는 “북한이 핵실험을 했지만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과는 다르다”면서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변

● **金통일부 장관, 北 비난해도 정부 원칙 견지(10/22, 연합)**

-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22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 지역회의’에서 ‘남북관계 현황과 상생 공영의 대북정책’을 소개하며 “북한이 비난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칙을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
- 김 장관은 북한이 우리 정부에 10·4선언 합의사항의 무조건적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약속을 존중하지만 우선 만나서 무엇을 지금 할 수 있고 무엇을 나중에 할 수 있는지 등을 구분해야 할 것 아니냐”며 “만나서 북한의 주장이 옳으면 우리가 14조3천억원을 다 쓸 용의가 있지만 얘기도 해보지 않고 약속을 할 수는 없다”고 거듭 강조

● **관계경색에도 남북협작 평양치킨집 호황(10/22, 연합)**

- 남북 당국간 관계가 경색 국면을 벗어나지 못한 채 악화 양상이지만, 남한의 ‘맛대로촌닭’이 북한의 ‘락원무역총회사’와 협작해 지난 6월 평양시 모란봉구역 개선문동에 문을 연 ‘락원 닭고기 전문식당’이 연일 문전성시
- ‘맛대로촌닭’ 서울 본점의 최원호(49) 사장은 22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평양 1호점의 한달 매출액은 1만8천 유로(약 3천180만원)로 주민들이 매장 앞에 줄을 서서 먹을 정도이고, 특히 배달이 잘 된다”고 언급, 하루 매출이 남한 돈으로 100만원 정도로 하루 100마리 정도의 닭이 소비되는 수준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北방송 “日 6자회담 참가자격 박탈” 주장(10/25)

- 북한의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25일 북핵 6자회담은 핵문제 해결을 위한 장이지 북한과 일본간 현안인 일본인 납북문제를 논의하는 장소가 아니라며 “일본의 회담 참가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방송은 일본이 “6자회담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납치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6자회담에서 이뤄진 합의의 이행을 거부하면서 대북 “제재 소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북한은) 일본에게서 이제라도 회담 참가자격을 완전히 박탈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고 말했다.
- 방송들은 “지금 대다수 여론도 6자회담 참가국들이 10.3합의에 따르는 자기의 의무를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유독 일본만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일본의 6자회담 참가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우리의 주장에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음.

● “北, 6자회담 재개시 ‘日배제’ 제기 가능성” <조선신보>(10/25)

- 최근 북한 매체들이 6자회담에서 ‘일본 배제’를 언급하는 가운데 북한은 회담이 재개되면 “일본의 회담 참가 문제를 공론화할 수 있다”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25일 주장.
- 신문은 ‘현실성 띠는 일본 배제론’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일본을 “비핵화 흐름에 역행하는 고독한 휘방꾼”으로 표현하고, 일본의 6자회담 참가 자격에 문제를 제기한 북한 매체들의 “논조는 (북한) 외교 당국의 의향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 신문은 “비핵화 제2단계에서 이행해야 할 의무를 포기한 것은 일본 뿐”이라며, 다른 나라가 일본 몫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대북 경제에 너지 지원이 마무리되더라도 “조선(북한)측이 일본의 공약 위반을 그대로 묵인할지 분명치 않다”고 말했다.

● “北 ‘김정일이후’에도 핵포기 안할 것” <中전문가>(10/25)

- 중국 정부산하 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해외원조를 계속 받아내 경제를 살리는 게 북한의 핵개발 목적중 하나이기 때문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살아있는 한 핵계획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5일 보도.
- 중국 외교부 산하 중국국제문제연구소(CIIS)의 진 린보 선임연구원



은 23일 ‘북한의 핵 역설’이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또 김정일 위원장 사후엔 군부가 권력을 잡을 가능성이 큰데, 그때도 북한은 남북통일을 추진하는 남한과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에 서기 위해 처음 수년동안은 핵계획을 계속 보유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음.

- 미국 워싱턴의 브루킹스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 있는 그는 이란 등과 달리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자체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경제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핵을 개발해 국제사회로부터 자발적이고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원조를 받아”내려는 것이라고 말했음.

● 濠정부 “대북 지원요청 신중히 고려하겠다”(10/24)

- 호주 정부는 24일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지지하며 회담의 진척을 돕기 위한 것이라면 그 어떤 요청도 신중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음.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크리스토퍼 힐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가 일본을 대신해 다른 나라가 북한에 중유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음.
- 그는 “일본인 납치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6자회담 체제에서 북한을 지원할 수 없다는 일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북한은 신속히 이 문제를 재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음. 그는 “호주 정부는 6자회담을 지지하며 미국과 일본, 중국, 한국, 러시아 등 6자회담 당사국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한편 호주 정부가 북한에 지원하기 위한 중유 20만t을 구입하는 데 도움을 달라는 요청을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전달받고 이를 검토 중이라고 호주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이 보도했음. 이 신문은 호주 외무부 대변인의 말을 인용, “호주 정부는 미국 및 일본과 북한 지원을 위해 논의했다”며 “현재 이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 韓-러 “북핵불능화 진척 따라 에너지 지원 수위조절”(10/23)

- 북핵 6자회담 러시아 측 수석 대표인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외무차관은 23일 모스크바 외무부 영빈관에서 한국 측 수석 대표인 김 숙 한 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북한의 테러지원 해제 이후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핵 불능화 프로세스와 6자회담 개최 시기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음. 양국은 북핵 불능화 2단계 마무리와 관련, 북한의 불능화 조치는 가역적(可逆的)이지만 5개국의 에너지 지원은 불가역적(不可逆的) 사항인 만큼 북한이 어떤 조치를 하는지를 봐 가며 경제·에너지 지원에 대한 보조를 맞춰나가기로 했음.
- 양국 대표는 일본의 대북 에너지 지원 지연에 대해 북한이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함과 동시에 일본의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음.



- **러 6자회담 대표, “지금 이 북핵 진전의 중요한 단계”(10/23)**
 - 북핵 6자회담 러시아 측 수석 대표인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외무차관은 23일 “지금 이 한반도 비핵화 실현의 중요한 단계인 만큼 당사국 간 협조가 절실하다”라고 밝혔다. 보로다브킨 차관은 이날 모스크바 외무부 영빈관에서 한국 측 수석 대표인 김 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북한의 테러지원 해제 이후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핵 불능화 프로세스와 6자회담 개최 시기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음.
 - 보로다브킨 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북핵 불능화 2단계 마무리라는 6자회담 프로세스에서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면서 “한국은 물론 당사국 간 입장 조율을 위해서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日총리 “미국이 납치문제 日입장 이해”(10/22)**
 -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총리는 22일 일본이 거부하고 있는 대북한 에너지 지원을 호주 등 다른 나라가 떠맡는 문제에 대해 미국측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6자회담에서 일본 입장이 악화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아소 총리는 이날 총리실에서 출입 기자단에게 “일본만이 소외되거나 하는 피해자 의식 같은 얘기는 없을 것이다. 특히 미국은 납치문제에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소 총리는 그러면서 “일본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납치문제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이런 자세로 나갈 것”이라며 납치문제의 진전이 없는 한 지원에 응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음.

- **北매체들, 연일 “6자회담서 日배제” 경고(10/22)**
 -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2일 일본이 납치문제 미해결을 이유로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에 불참하겠다는 것은 “6자회담 자체를 파탄시키자는 것”이라며 “우리는 일본이 참가하는 6자회담이 필요하겠는가에 대해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노동신문의 이런 주장은 전날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이 일본의 “회담 참가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한 데 이은 것.
 - 노동신문은 ‘회담 참가 자격을 잃은 고약한 훼방꾼’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일본을 “문제 해결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들의 불순한 목적 추구를 위해 6자회담에 끼어든 불청객이며 시비꾼”이라고 비난하며 “일본이 지금과 같이 못되게 놀다가는 6자회담 당사자들의 미움과 배척을 받아 회담장에서 아예 밀려날 수 있다”고 경고했음.

- **“對北 중유지원 해결 확신” <美국무부>(10/22)**
 - 미 국무부는 21일 북한에 불능화의 대가로 제공하기로 한 중유 지원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북한에 중유를 지원할 다음 차례는 순서상 러시아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또 일본이 북핵 검증과 불능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참여하게 될지는 전적으로 일본에 달렸다고 말해 일본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사안임을 시사했음.

- 손 매코 맥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이 분담키로 한 북한에 대한 에너지(중유 환산 20만t) 지원과 관련, “6자회담에 참가하고 있는 5개국에 에너지 지원 의무를 지키기 위한 방안을 서로 협의하고 있다”면서 “5개 회원국은 의무를 준수하게 될 것이라는 높은 확신을 하고 있다”고 말했음.

● 日외무상, 北에 에너지 대신 핵폐기 자금 지원 시사(10/22)

- 일본의 나카소네 히로부미(中曾根弘文) 외무상은 2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납치 문제에 진전이 보이지 않는 한 북한에 경제 및 에너지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일본의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그러나 핵포기와 관련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통해 기여해 왔으며 이를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 관련국들과 논의하고 싶다고 밝혔음.
- 일본이 검토 중인 방안은 북한의 영변 핵 시설의 폐연료봉과 플루토늄 제거, 원자로와 다른 시설 파기 등과 같은 작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복수의 소식통이 전했다.
- 소식통들은 호주와 뉴질랜드가 이미 각각 1천만달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대략 3만t의 중유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일본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 한편, 일본은 에너지 지원 대신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데 160억 엔 규모에 달하는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닛케이 신문이 이날 보도.

● 北 신문, 6자회담에서 日 배제 주장(10/21)

- 북한의 내각기관지 민주조선은 21일 북핵 6자회담 합의와 관련, 일본의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 불참 등을 거론하면서 일본이 6자회담 참가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
- 민주조선은 ‘일본의 6자회담 참가 자격을 논의할 때가 되었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6자회담 참가국들이 자기의 의무 이행을 하겠다고 하는 때에 유독 그것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생떼질하는 일본 반동들에게서 회담 참가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해 신문은 “지금까지 조(북)·일 사이에 논의돼 왔고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으로 이미 명백해진 것”이라며 일본에 대해 “저들의 과거청산 문제는 당반(선반) 위에 올려놓고 납치문제만 선전하면서 조일관계를 극도로 격화시키고 6자회담을 파탄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日, 북핵 폐기비용 부담 검토” <닛케이> (10/21)

- 일본 정부가 북한의 핵폐기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지(日本經濟)신문이 21일 보도. 일본은 자국민 납북문제 미해결을 이유로 6자회담에서 합의된 대북 에너지 지원을 거부해 고립을 자초하고 있으나 다음 단계로 추진될 핵폐기 과정에는 적극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6자회담에서의 고립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 일본 정부는 납치문제가 진전되지 않는 한 에너지 지원에 참여할 수 없다고 계속 버틸 경우 한국 등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로부터 납치문제만 고집하며 핵문제는 경시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 힐 차관보 “北, 日 대신할 새 후원자 얻게 될 듯” (10/20)

-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미국측 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19일 “북한이 곧 일본 대신 대북 에너지 지원에 참여할 새 후원국을 얻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힐 차관보는 이날 아사히(朝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일본을 대신할 국가가 어떤 국가인지는 말할 수 없지만 현재 6자회담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이외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들 4개국과 일본은 지난해 2월 13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한다면 중유 100만톤 상당의 에너지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 그러나 일본은 북한이 자국민 납치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데 불만을 갖고 일본이 부담해야 할 중유 20만톤의 지원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

나. 미·북 관계

● 게이츠 국방 “北.이란核 준비경쟁 촉발 우려” (10/26)

-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 문제는 다른 국가들의 핵무기 개발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게이츠 장관은 25일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웹사이트에 게재된 인터뷰에서 북한과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데 따른 당장의 군사적 위험보다는 핵개발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측면이 더욱 우려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만일 미국이 북한과 이란 핵프로그램에 대해서 무언가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억지력을 신뢰할 수 있는지가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차기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다뤄야 할 과제 가운데 북한과 이란의 핵문제가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 **美, WMD물자거래 남·북기업 등 제재(10/24)**

- 미국 정부가 북한과 이란, 시리아에 대량살상무기(WMD) 제조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한 남·북한 기업을 비롯해 9개국 13개 업체에 대해 지난 8월 중순 제재를 가했던 것으로 나타났음. 24일 미 연방관보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에 따르면 미 정부는 WMD관련 물자가 북한, 이란, 시리아로부터 반출 또는 이들 국가로 반입됐을 것이라는 믿을 만한 정보를 토대로 제재를 가했음.
- 제재대상 기업은 북한의 조선광업산업개발회사(KOMID)와 조선대성무역회사, 한국의 'Yolin/Yullin Tech, Inc.', 러시아 국영 무기수출업체인 '로스보론엑스포트(Rosoboronexport)' 등 13개 업체. 나머지 국가는 3개 회사가 제재를 받은 중국, 이란, 시리아, 수단, 베네수엘라, 아랍에미리트. 이번 조치는 2010년 9월까지 유효하며, 이들 회사는 미국의 모든 정부 부처에서 실시되는 재화, 용역, 기술관련 조달계약에 참여하지 못하게 됨.

● **美 “北고위관리 망명요청설 정보 없어”(10/24)**

- 미 백악관과 국무부는 23일 북한 고위관리가 중국 마카오를 통해 탈출해 미국에 망명을 요청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 정보가 없다고 밝혔음. 고든 존드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이와 관련, 연합뉴스에 보낸 이메일에서 “우리는 그에 관해 정보가 없다”고 답변했고 멜라니 히긴스 미 국무부 동아태국 대변인도 존드로 대변인과 똑같은 입장을 전달했음.
- 앞서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에도 여행객을 자주 보내는 마카오에 있는 관광회사의 관계자를 인용해 직급이 확인 안된 북한 고위관리가 마카오를 통해서 망명을 요청했다고 보도한 바 있음.
- 우드 부대변인은 또 북핵 6자회담 수석 대표회의 일정도 현재까지 정해진 게 없고 다만 의장국인 중국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 **유니세프 평양소장 “北, 90년대 최악상황 재연중”(10/23)**

- 고팔란 발라고팔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 북한사무소 대표는 23일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주최한 국제학술회의에서 “현재 북한의 식량 상황은 엄청나게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음.
- 그는 “올해의 식량난은 지난해 있었던 흉수가 식량 공급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면서 최근 북한에 대한 한국과 중국 등의 식량 원조가 많이 줄어든 점도 이유로 들었음.
- 그는 “지난 5월 북한의 두 지역을 방문한 결과 북한의 식량 상황이 굉장히 악화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배급 시스템은 붕괴되고 있었다”며 “식량 상황은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거듭 우려했음.



- **WFP, 北동북부에 ‘인도주의적 비상사태’ 경고(10/23)**

 -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 부족으로 최근 북한의 식량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으며, 긴급 지원이 없으면 북한 동북부의 함경북도와 양강도 전역 및 함경남도 일부 지역에서 ‘인도주의적 비상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세계식량계획(WFP)이 밝혔다.
 - WFP는 22일 발표한 월간 ‘사업 우선순위(Operational Priorities)’ 보고서에서 대북 지원을 위해 보유한 자체 식량이 곧 동날 것이라며 이같이 밝히고 국제사회의 긴급 지원을 호소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3일 전했다.
 - WFP는 보고서에서 “(약속된) 식량원조 선적분의 전달이 늦어지고, 다른 원조국들의 제한된 기부로 앞으로 6개월간 북한에 지원할 식량이 심각하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 부족분을 14만 7천으로 추산했다. 보고서는 북한 “서부 지역의 2백70만 주민들에 대한 WFP 지원 식량은 10월 초부터 떨어지기 시작했고, 특히 식량 상황이 취약한 동부 지역의 1백40만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식량은 11월 중 모든 종류가 완전히 동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 **“北 배급층 하루세끼는 10명중 2.5명만 가능” <WFP평양소장>(10/22)**

 - 북한의 식량사정이 ‘만성적인 식량난’ 단계에서 ‘극심한 식량 및 생계 위기’, 나아가 ‘인도주의적 긴급상황’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장 피에르 드 마저리 세계식량계획(WFP) 평양사무소장이 밝혔다. 마저리 소장은 22,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와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미래’라는 국제학술회의에 앞서 미리 배포한 발표문에서 북한 주민들의 식량 입수 경로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 그에 따르면, 북한에서 경작 외에 수렵이나 채집을 통해 식량을 얻는 인구가 공공배급 대상자의 경우 2003~2005년 평균 50% 선이었다가 올해 70%를 넘어섰고, 협동농장원의 경우 60% 초반에서 70% 중반으로 크게 증가했다.
 - 세계보건기구(WHO) 평양사무소의 보건의로 전문가인 아빈드 마서(Arvind Mathur) 박사는 ‘임산부 및 영유아 사망률 감소 전략’이라는 제목의 발표문에서 북한 산모들과 아동들의 영양부족 상태에 따른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 **“北-시리아-이란 핵연계..역내 핵확산 조장” <美전문가>(10/22)**

 - 북한과 이란이 핵보유국이 되면 극동과 중동에서 핵확산을 급속도로 조장할 수 있다며 한국은 북-시리아-이란의 핵 연계에 따른 이런 위협에 맞서기 위해 미국은 물론 이스라엘과도 정보공유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미국의 민간군사정보분석업체인 ‘제인스 인포메이션 그룹’의 핵문제 전문가인 크리스티나 린 박사는 21일 워싱턴 소재 한미경제연구소



(KEI)의 학술논문 발표회에서 ‘북한-시리아-이란 핵연계와 이스라엘과 한국에 대한 전략적 의미’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음. 린 박사는 “북한의 핵은 이란의 핵이 중동의 지역문제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아시아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라며 “악의 축인 북-시리아-이란의 핵 연계 문제를 다루는 것은 국제 안보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 그는 “북한과 이란은 너무 오랫동안 한국과 이스라엘의 핵 문제에 대한 정보공유 부재를 악용해왔는데 최근 들어 한국과 이스라엘이 대화를 시작하고 헤즈볼라와 하마스의 연계뿐만 아니라 북-시리아-이란의 연계에 대해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 <美대선 D-13> 백악관 “두 후보에 북한이슈 브리핑”(10/22)

- 미 백악관은 최근 북한 상황에 대해 민주당 버락 오바마, 공화당 존 매케인 후보에게 브리핑했다고 21일 밝혔다. 데이비드 페리노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과 이란문제와 같은 이슈들에 대해 두 후보에게 철저하고 공평하게 브리핑했다”고 말했다.

● 美, 내년 대북지원 예산 대폭 제한(10/21)

- 미국은 북한 등 인신매매 규제에 나서지 않는 국가에 대한 예산 지원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백악관이 밝혔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무장관은 이날 북한과 이란, 쿠바에 대해 이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의 대통령 비망록을 발표했다. 이같은 결정은 전 세계의 여성 및 어린이 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미국 법에 따른 것.
- 그러나 미국과의 북핵 6자회담 비용이나 이란과의 문화교류 비용은 이번 예산 제한에서 제외됨.

● 美ABC, ‘김정일 공개활동’ 보도 삭제 해프닝(10/21)

- ABC방송은 20일 오후 긴급뉴스를 통해 그동안 뇌졸중 등 와병설이 나돌던 김 위원장이 2개월만에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고 보도. 하지만 ABC 방송의 배경화면은 지난 2002년 김 위원장이 러시아 극동지역을 방문했을 때 찍었던 화면이고, 특히 이 화면에는 이미 숨진 연형묵 전 북한 총리의 모습도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되자 ABC 방송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서둘러 기사를 삭제했음.
- ABC방송 관계자는 “국제뉴스부에서 (김정일에 관한) 새로운 동영상도 없다고 해서 그 기사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내리기로 했다”면서 “누군가 화면을 잘못 파악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 “北 중대발표설 아는 바 없어”<미국무부>(10/21)

- 로버트 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보도를 접하기는 했지만 아는 바가 없다”면서 “어떤 발표가 있을지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으며 뭐가 정말 나오게 될지 단지 지켜볼 수밖에 없다. 추가할 게 더 없다”고 말했다.

- 그는 김 국방위원장의 건강문제가 최근 북한과 협상에 영향을 줬는지에 대해, “김 위원장의 건강에 관한 보도들이 크리스토퍼 힐(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과 성 김(대북특사)이 한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가 짐작하기는 어렵고 또 알 수도 없다”고 말했다. 우드 부대변인은 또 북한이 6자회담에서 합의한 핵검증을 받아들이고 불능화 작업에 원상 복귀함에 따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도 조만간 다시 열릴 것이라고 전했다.

● 美 MS, 불법체류 탈북소년 무료 변론(10/21)

-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와 미 유명 여배우 앤젤리나 졸리는 불법체류 어린이 지원 기관인 ‘변론이 필요한 어린이들’(KIND)을 조직, 지역 거물 변호사들이 동참한 가운데 향후 3년간 1천450만달러의 예산을 확보해 법률 지원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20일 미 일간 시애틀타임스에 따르면 불법 체류 어린이에 대한 법률 서비스 확대에는 미국내 유력 로펌 변호사들이 참여하고 여배우 졸리가 대변인 역할을 맡게 됨.
- 고문 변호사 브래드 스미스는 “불법 체류 신분이 된 어린이 중 아버지와 함께 북한을 탈출한 15세 소년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스미스는 “이 소년은 북한을 떠난 뒤 우여곡절 끝에 캐나다에서 아버지와 헤어지게 됐고 혼자 미국 국경을 넘어 왔다가 체포됐다”고 말했다.

다. 중·북 관계

● 北-中 임업협력 양해비망록 체결(10/23)

- 23일 중국 국무원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북한 국토환경보호성 최상호 대외경제협력국 국장은 지난 12일 중국 국가임업국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해 다음날인 13일 북중 임업협력에 관한 양해비망록을 체결했다.
- 양국은 양해비망록에서 앞으로 삼림정책, 법규, 기구 제정, 삼림경영, 자원관리 및 산지종합개발, 방화, 조림기술, 병충해방제, 야생동식물 및 습지보호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라. 일·북 관계

● EU·일본, 이달말전 대북인권결의안 공동제출(10/25)

- 유럽연합(EU)과 일본은 오는 30일까지 유엔에 대북 인권 결의안을 공동 제출할 예정이라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5일 유엔 주재 프랑스대표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
- 익명을 요구한 이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결의안 제출 마감일인 30일까지 결의안 초안을 제63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며



제3위원회가 결의안에 대해 11월 말 표결, 총회로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 EU와 일본의 대북 인권 결의안 제출은 올해가 4번째이며 유엔 총회는 지난 3년간 이들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한국의 유엔대표부 공형식 공보관은 한국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결의안에 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 北매체 “日언론 중대발표설 보도는 허위날조”(10/23)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일본의 요미우리신문과 산케이신문이 북한의 중대발표설과 해외주재 외교관들에 대한 대기령설을 보도한 것은 “완전한 허위 날조”라고 23일 밝혔다.
- 중앙통신은 ‘용서치 못할 무엄한 행위’라는 제목의 보도물에서 “우리는 그러한 발표를 생각해 본 적도 없으며 그와 관련한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 통신은 특히 두 신문이 “우리 최고수뇌부(김정일)의 ‘건강이상설’을 운운하면서 공화국(북한)의 존엄에 대해 악랄하게 횡설수설한 것”은 “너절한 모략행위”이고, “우리 체제의 공고성에 대해 배아파하면서 그에 먹칠을 해보려는 불순세력의 기도가 깔려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 北, 유엔서 日에 ‘위안부문제’ 해결 촉구(10/22)

- 북한 대표는 지난 14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제63차 회의에서 일본에 대해 “위안부 문제를 속히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22일 전했다.
- 북한 대표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깨끗한 과거청산 없는 현재와 미래의 여성진보란 상상할 수 없으며 언제가도 해결될 수 없다”면서 “일본이 조선강점 시기 20만명의 조선 여성들에게 강요한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반인륜적 범죄이며 반드시 결산돼야 할 중대 인권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 역사의 그 어느 갈피에도 군대가 10대의 나이 어린 소녀들을 전장으로 끌고 다니면서 성노예 생활을 강요한 전례를 기록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마. 러·북 관계

● 北, 잇따라 러시아제 신형 여객기 구입<RFA>(10/22)

- 북한의 고려항공이 잇따라 러시아제 여객기를 새로 구입해 중국항공사인 에어차이나와 서비스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RFA)이 22일 보도.
- 방송은 고려항공과 연계해 관광사업을 하는 중국내 외국여행사 대표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지난해 12월 TU-204 1대를 구입한 데 이어 올해 1대를 추가 도입했고, 앞으로도 러시아의 일류신(IL)-96이나



수호이(Sukhoi) 슈퍼제트100 등 신형 비행기로 노후한 기존 여객기를 교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이몬이라는 이름의 이 여행사 대표는 자신이 모집한 여행객들이 몇차례 TU-204를 이용했다면서 “(고려항공이) 베이징에서 평양까지 1주일에 3번 운항하는데, 항상은 아니지만 주로 새 비행기가 뜬다”고 말했다.

- 고려항공은 이 TU-204에 일반석보다 등급이 높은 ‘비즈니스석’도 운영하고 있으며, 승객들이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LCD 화면과 음악 감상, 여행경로 정보 제공 시설도 갖췄다고 방송은 소개했음.

바. 기타

● 남북, 27일 군사실무자 접촉 합의(10/25)

- 남북은 27일 오전 10시 남북관리구역 서해지구 내에서 중령급 군사실무책임자 접촉을하기로 합의. 국방부는 25일 “남과 북은 북측의 제의로 남북 군사실무책임자 접촉을 27일 오전 10시 갖기로 했다”며 “이번 접촉에서는 군 통신 정상화 문제를 비롯한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현안이 협의될 예정”이라고 밝혔음.
- 국방부는 접촉 장소에 대해 남북관리구역 서해지구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 구역 내에 있는 출입사무소(CIQ)에서 만남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 우리 측에서는 서해지구 군사실무책임자인 김정배 육군 중령 등 4명이, 북측은 상좌(중령과 대령사이 계급)급 장교 3~4명이 참석함.

● “몽골 입국 탈북자 한해 700명..모두 3국행”<몽골의원>(10/25)

- 중국 등을 거쳐 몽골에 입국하는 탈북자가 한해 평균 700명에 이르며 몽골 정부는 이들을 모두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제3국으로 보내고 있다고 몽골의 램자브 군달라이 의원이 밝혔음.
-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이하 국제의원연맹)’의 공동의장으로 25일 열린 이 연맹 총회 참석을 위해 방한한 군달라이 의원은 몽골 입국 탈북자에 대한 난민지위 부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엔 “몽골은 국제 난민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이날 전했다.
- 군달라이 의원은 몽골내 탈북자를 위한 난민촌 건립 문제에 대해선 “현 시점에서 필요치 않다”면서 “북한 난민의 숫자가 그리 많지 않고, 또 지금도 잘 해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다만 탈북자들의 몽골 입국이 늘어날 경우 “정부를 설득해 탈북자들을 위한 난민촌을 짓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캐나다, 올해 탈북자 4명에 난민지위 인정(10/24)

- 캐나다 정부가 지난 7월부터 9월 사이에 4명의 탈북자에게 난민지위를 인정함으로써 캐나다에서 난민지위를 얻은 탈북자는 모두 8명으로



늘어났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4일 전했다. 캐나다는 2000년, 2003년, 2005년, 2007년에 각각 한 명씩 탈북자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했음.

- 올해 탈북자가 캐나다에서 난민지위를 신청한 사례는 모두 25건이며, 이 가운데 19건을 처리해 난민인정 4건, 거부 1건, 심사 도중 포기 및 신청 철회가 14건으로 집계됐음.
- 캐나다 이민난민국의 스테판 메일파트 대변인은 난민 심사에 계류된 탈북자가 134명이라고 밝히고 탈북자 외에도 다른 나라 출신 난민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평균 1년 이상 걸리지만 “탈북자들은 난민심사를 신청한 순간부터 정부 지원금과 교육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것은 물론 정부에서 지원하는 집에서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난민 지위를 받고 영주권을 취득한 탈북자가 3년 이상 캐나다에 체류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탈북자가 캐나다에서 출산을 할 경우 출생아는 캐나다의 시민권자가 됨.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한미, 4차 방위비협상 29~30일 서울 개최(10/26)

- 한국과 미국은 내년 이후 적용될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 제8차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3차 고위급협의를 29~30일 서울에서 개최. 한·미는 이번 협의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제공방식을 지금의 현금 위주에서 현물 위주로 바꾸는 방안과 한국의 분담금 증액비율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
- 제7차 방위비협정의 시한이 올해 말까지여서 양측은 연내에 새 협정에 합의해야 함. 외교 당국자는 26일 “연말까지 협상을 마무리하려면 시간이 별로 없다”면서 “지금까지의 협상에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한만큼 이번부터는 본격적인 협상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지난 3차례의 협의에서 미국 측은 한국의 현재 분담비율을 다른 동맹국과 비슷한 ‘공평한 수준’(50%까지)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내년의 경우 분담금 증액비율을 최소 6.6%에서 1999~2004년의 평균 분담금 증액률인 14.5%까지 올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은 이에 대해 ‘우리의 부담능력에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식의 분담’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하며 내년의 경우 지난해 국내 물가상승률인 2.5% 정도만 증액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 **주한미대사관 “VWP 위반하면 재이용 못해”(10/24)**

- 주한 미대사관측은 90일 이내의 관광 및 상용목적에 한해 우리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무비자 미국여행이 다음 달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마크 스트레기 주한 미대사관 총영사 대리는 이날 주한 미대사관 인터넷 커뮤니티인 ‘카페 USA’를 통해 한국 네티즌들과 가진 채팅에서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요건을 충족하는 한국 국민들은 11월부터 무비자로 미국을 여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 마이클 처토프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도 23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한 VWP가 다음달 중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스트레기 총영사 대리는 하지만 “VWP를 사용해 미국에 입국하시는 분들 중 90일 이상 체류하거나 VWP의 요건을 위반하신 분들은 다음 번에 미국 입국시에는 VWP를 이용하실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나. 한·중 관계

● **韓中日+아세안, 금융위기극복 800억弗 공동기금 조성(10/24)**

- 한국, 일본, 중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소속 10개국 정상들은 24일 오전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ASEAN+3’ 비공식 조찬 회의를 열고 국제금융 위기 극복을 위한 공조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이들 정상은 800억 달러 규모의 차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 공동기금을 내년 상반기까지 조성키로 합의하고 역내 경제 감시 강화를 위한 별도 기구의 설립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 아세안 가입국들과 한·중·일은 지난 5월 800억 달러 규모의 CMI 공동기금을 조성하되 한·중·일이 80%, 아세안 국가들이 20%를 분담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 회의에서는 그러나 한·중·일 3국간 출연 비율을 놓고 일본은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중국은 외환보유고를 기준으로 하자고 맞서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 회의에서는 금융위기 대응과 정책 조율을 위한 역내 공조를 강화할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으며,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다자간 협력체계를 통한 국제 공조에 적극 참여, 아시아 국가들의 역할을 강화하자는 데 합의했다.

● **청용화 中대사 “반한감정 조장 인터넷 조사해야”(10/23)**

- 청용화(程永華) 신임 주한 중국대사는 23일 “반한감정을 조장하는 인터넷상의 얘기는 철저하게 조사해 원천과 진위를 판단하고 사실이 아니면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 오는 26일 서울로 부임하는 청용화 대사는 이날 베이징 시내 외교부 외국기자프레스센터(IPC)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주한 대사로 임명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청 대사는 “중국 내부에서도 남방인과 북방인 사이에 음식이나 생활 습관을 놓고 마찰이나 의견차이가 있다”면서 “상호 이해 부족은 충분한 교류와 접촉을 통해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 대사는 또 “나는 중국 속담에 나오는 먼길을 가는 것처럼 무거운 책임을 갖고 있다”면서 “여기서 먼길을 간다는 것은 어떤 것의 경우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 주한 中대사관, 고시원 흉기난동 비상대책팀 구성(10/21)

- 주한 중국대사관은 20일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고시원 흉기난동 사건으로 중국 국적의 재중동포 여성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은 것과 관련, 비상대책팀을 구성해 사태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고 중국의 반관영통신 중국신문사가 21일 보도.
- 통신은 중국의 관영 CCTV를 인용, 주한 중국대사관은 사건발생 소식이 전해진 직후 상하이밍(邢海明) 대리대사를 조장으로 하는 응급처리소조를 구성하고 쑹위민(宋玉民) 영사를 현장으로 보내 중국 국적의 피해자 신원 및 사건경위 파악에 나섰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주한 중국대사관은 우리 정부에 신속한 사건 조사와 함께 부상자 치료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음.

● 中, 청용화 주한대사 임명 발표(10/20)

- 중국이 청용화(程永華, 54) 신임 주한 중국대사를 임명했다고 19일 공식 발표했다.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은 19일 열린 신임 외교사절 선포식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결정한 청용화 신임 주한대사 등 9명의 재외 외교사절 명단을 발표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음.
- 청 신임 대사는 1977년 주일대사관에서 외교관 생활을 시작해 주일대사관 정무공사를 지낸 일본통으로 아시아담당 부국장 등을 지내면서 한국 관련 업무도 담당했으며 2006년부터는 말레이시아 대사로 일해 왔음.
- 부인과 사이에 1녀. ▲지린(吉林)성 창춘(長春)(54) ▲주일대사관 근무(1977~1983) ▲외교부 아주사 2~3등 서기관(1983~1989) ▲주일대사관 1~2등 서기관(1989~1992) ▲주일대사관 참사관, 공사참사관(1996~2000) ▲외교부 아주사 부사장(2000~2003) ▲주일대사관 정무공사(2003~2006) ▲주 말레이시아 대사(2006)

다. 한·일 관계

●李大통령 “한일관계 주춤하는 일 없었으면”(10/24)

- 이명박 대통령과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총리간 24일 첫 베이징(北京) 정상회담은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음.
-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아소 총리의 취임을 축하하고, 지난번



제 취임식에도 참석해 준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 드린다”면서 “아소 총리께서 한일의원 연맹에서 일하시고 외무대신 때도 양국관계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굳건하게 유지, 발전시키는데 함께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아소 총리는 “2년동안 외무대신으로 있을 때 한국을 4번 방문하고 외무장관 회의를 11번 했다”고 말한 뒤 배석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거론하며 “양국관계가 어려울 때 한국 관계자들이 많이 노력을 해 줬는데 일본 총리로서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 이어 비공개 회담에서 아소 총리는 “한일 양국이 이른바 시장경제와 인권 등 중요한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고 그래서 한국이 일본에도 매우 중요한 나라”라고 말했고,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양국관계가 주춤한 일이 있었지만 뒤로 후퇴한 일은 없었다. 앞으로는 주춤한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 아소 총리는 또 “한일관계를 성숙한 파트너십이라고 표현하고 싶고 이 같은 지평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양국간 문제뿐 아니라 지역문제 등에 대해서는 정상끼리 언제든지 수시로 전화를 주고 받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 한·일정상, 금융위기 극복 적극협력 합의(10/24)

- 이명박 대통령과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총리는 24일 오전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고 국제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의견을 모았다.
- 두 정상은 회담에서 한·중·일과 ASEAN(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이 참여하는 800억 달러 규모의 차임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 공동기금 조성이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한·일간 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또 국제금융시장과 양국간 경제·금융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수시로 관련 정보와 의견을 교환키로 했으며, 금융위기 확산 방지를 위해 새로운 다자간 협력체제 구축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 아울러 두 정상은 한·일 양국간 미래지향적인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으며, 이 대통령은 북핵 사태 해결을 위한 우리의 입장을, 아소 총리는 일북간 최근 기류를 각각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북핵 검증을 위한 미·북간 합의에 따라 후속 조치 이행 과정에서도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 두 정상은 이와 함께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제1차 한·중·일 정상회의의 연내 개최를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 <한일해협권 영화제 열린다>(10/23)

- 한일해협연안에 있는 8개 시·도·현이 ‘한일해협권 영화제’를 2009년과 2010년에 사가현과 제주도에서 각각 개최하는 등 문화교류를



확대함. 제주와 부산, 전남, 경남 등 우리나라 4개 시·도와 후쿠오카(福岡), 사가(佐賀), 나가사키(長崎), 야마구치(山口) 등 4개 현의 지사들은 23일 제주에 모여 제17차 회의를 가진 뒤 이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 이들은 “한일해협연안 시도현의 교류와 광역경제권 구축을 통한 공동번영에 관해 진지하게 논의했다”며 “지난 회의에서 결정한 ‘교류를 통한 공동번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시도 발전연구원 및 공공시험연구기관 등과 공동연구를 통한 새로운 교류사업을 적극 발굴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문화교류사업으로 기존의 ‘한일 만화페스티벌’에 이어 ‘한일해협권 영화제’를 2009년에는 사가현에서, 2010년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각각 개최한 뒤 이의 성과를 바탕으로 후속사업을 검토하기로 했음.
- 또한 광역관광협의회 사업의 일환으로 8개 시도현 크루즈관광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며, 2009년 경남에서 개최되는 ‘제3회 아시아 아마추어 바둑선수권 대회’에 8개 시도현이 적극 참여하기로 했음.

● “日총리, 12월 韓中日 3국 정상회담 제의”(10/21)

- 일본의 아소 다로(麻生太郎) 총리가 한국과 중국에 대해 오는 12월 초순 후쿠오카(福岡)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담 개최하는 방안을 타진하고 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21일 보도. 통신은 12월 6일이나 7일 개최하는 방향으로 일정이 조율되고 있다고 전했다.
-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은 지난 9월 고베(神戸)에서 개최하는 방안이 추진됐었으나 독도 영유권 문제로 관계가 불편해진 한국측의 소극적인 태도에다 일본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의 갑작스런 사퇴라는 돌발 변수로 무기 연기된 바 있음.

라. 한·러 관계

● 러' 한국에 어획쿼터 8천340t 추가 배정(10/21)

- 러시아가 올해 북태평양(베링해)에서 조업할 수 있는 어획 쿼터 8천 340t를 한국에 추가 배정했음. 주러 한국대사관은 21일 양국 수산당 국자들이 만나 ‘러시아가 한국에 대한 어획쿼터를 추가 배정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교환했다고 밝혔음.
- 이번 추가 배정은 중국이 러시아 측에 반납한 어획쿼터 일부를 우리 정부가 협상을 통해 얻어낸 것으로 지난달 말 이뤄진 한·러 정상회담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지난달 29일 이명박 대통령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우리측에 대한 명태 어획쿼터를 4만t으로 늘려 달라고 요청한 바 있음.
- 이번에 추가로 확보한 8천340t 중 명태는 8천t으로 올해 한국이 러시아 정부로부터 배정받은 총 명태 쿼터(2만500t)의 39%에 해



당하는 양임. 명태를 제외한 나머지 340t은 혼획할 수 있는 대구(40t), 청어(200t), 오징어(100t) 등.

마. 기타

● 韓-EU 통상장관회담, 내달 10~11일께 개최(10/26)

-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막바지의 '최종 담판'이 될 한국-유럽연합(EU) 통상장관회담이 내달 10~11일께 개최될 전망이다. 25일 이명박(李明博) 대통령과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FTA 연내체결 의지가 거듭 확인된 가운데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릴 양자 통상장관회담은 협상 타결을 판가름하는 자리가 될.
- EU 외교소식통은 유럽의회의 인준을 받아 공식적으로 통상 책임자의 업무를 시작한 캐서린 애슈턴 EU 통상담당 집행위원과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간 회담을 내달 10~11일께 갖는 쪽으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 양측은 통상장관회담 결과에 따라 12월 초 서울에서 8차 협상을 통해 협정에 서명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음.

● 한.프랑스, 한-EU FTA 연내체결 주력 합의(10/25)

- 이명박 대통령과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25일 오전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새 정부 출범후 첫 정상회담을 열어 국제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하고 한-EU(유럽연합)간 FTA(자유무역협정)의 연내 체결을 위해 주력하기로 합의했음. 두 정상은 또 세계적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 내달 15일 워싱턴에서 열릴 다자 정상회의(G20)에서 구체적인 금융위기 해법이 도출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기로 했음.
- 이 대통령은 한-EU FTA와 관련, "실무적으로 준비해 가급적 빨리 타결되도록 노력하자"면서 "가급적 사르코지 대통령의 EU 의장 임기(올 연말)가 만료되기 전에 타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대해 사르코지 대통령은 감사의 뜻을 표했고, 배석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EU와 한국은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다. FTA 협정이 조기에 타결되기를 희망한다"고 환영했음.
- 이 대통령은 또 세계 금융위기 해법과 관련, "유럽이 위기극복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그 과정에서 사르코지 대통령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존경의 뜻을 표한다"면서 "지금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침체로 확산되고 있어 걱정인데 이번 워싱턴 회의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시간을 더 끌면 세계경제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만큼 중요한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 **한·베트남 정상회담..협력확대 합의(10/24)**

- 이명박 대통령과 응웬 쩌우 쩌우 베트남 총리는 24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통상·투자 증진과 고위 인사 교류 활성화 등을 통해 기존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음.
- 두 정상은 회담에서 양국간 영사·교민분야 협력 강화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으며, 내년 상반기 한국에서 개최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한-아세안 협력발전에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이 회의를 통해 한-아세안의 관계가 한층 심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음.
- 이 대통령은 베트남에 진출하고 있는 1천500여개 한국기업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 뒤 “베트남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개발협력 대상국인 만큼 앞으로 협력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이 대통령은 또 한국에 체류중인 베트남 근로자들이 한국 경제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들의 근로여건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음.

● **내년부터 프랑스로 연2천명씩 취업관광(10/20)**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0일 외교부 청사에서 필립 티에보 주한 프랑스대사와 ‘한·프랑스 간 취업관광사증(워킹홀리데이)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음. 한-프랑스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은 양국의 18~30세 젊은이들이 최대 1년간 상대국에 체류하며 관광을 할 수 있고 여기에 필요한 비용을 벌기 위해 취업도 가능토록한 제도.
- 외교부는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은 어학연수에 비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간 체류하며 상대국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라며 “양국 청년들의 교류 증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음.

● 국제관계연구실 제공